

# 조세 · 재정 BRIEF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12. 15(월)

## 지역발전정책과 재정정책

### I 배경 및 문제점

- 글로벌 경기불안정,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 상황 하에서 지역발전관련 재정효율화 방안 모색 필요한 상황
  - 지역발전정책은 국가의 중요한 재분배 수단 중 하나임
  - 최근 들어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단위의 재분배가 중요시 되어가고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우선순위도 복지지출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정부의 지출규모나 구성만으로 볼 때에는 지역발전 관련 재원은 감소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임
  - 그러나 선진국들의 추세를 보면, 정부재정 투입규모가 감소한다고 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역발전정책을 소홀히 다루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오히려 글로벌 경기악화 이후 EU는 낙후지역 지원은 증가추세이며, 미국은 지역간 소득격차 불안정이 심화되자 그간 하지 않았던 연방차원의 지역발전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영국 또한 정부직접 지원방식의 지역발전 재원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런던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컨트롤 타워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등 주요국의 지역정책실험은 계속되고 있음
  
- 정부 예산 중 복지를 제외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2 지역발전정책과 재정정책

- 지역발전과 관련한 정부재정규모는 '지특회계'로 제한되고 있으나, 정확히는 관련 국고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자체사업 포함)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정지원규모는 매우 큼
  - 현재 지역발전정책은 사실상 지방재정지원과는 별개로 검토되고 있으며 '지특회계' 내에서의 재정효율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고 있는 지역발전과 관련한 재정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파악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예: '자본지출' 규모 정도)
  - 정부재정 투입규모만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는 지역발전재원 규모가 큰 나라일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발전정책은 정권마다 중요한 국정과제에 해당하였음
- 정부주도의 지역발전정책은 그간 공간지원정책으로 이루어져왔고, 동시에 막대한 규모의 지방재정지원도 지속되었음
- 1960년대 이후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지역발전'은 중요 국정과제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한 정책이 새로 정립되고 있지만 기존의 지방재정지원 정책과의 분석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그 이전 정부에서는 권역별 지역발전정책과 지방재정지원정책 모두 낙후지역, 지역간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되었음
  - MB 정부의 경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바 있음
  - 박근혜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으로 마을 단위의 '행복생활권'을 지정하였고 지특회계 개편하는 과정에서 '사회계정'이 도입되었음

<표 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시 기	배경 · 목표	주요 정책
1960~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곤의 악순환 탈피</li> <li>자립경제기반 구축</li> <li>공업화 기반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li> <li>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li> <li>지방공업개발법 제정(1970)</li> <li>공업단지 및 수출산업단지 조성</li> </ul>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장과 복지의 조화</li> <li>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li> <li>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li> <li>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li> <li>제1차 수도권정비계획(1984~1996)</li> <li>서해안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li> </ul>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분산형 국토골격 형성</li> <li>생산적 · 자원절약형 국토형성</li> <li>국토환경의 보전</li> <li>통일 대비 국토기반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li> <li>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li> <li>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법(1994)</li> <li>8개청 3개 기관을 대전청사로 이전</li> </ul>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균형발전으로 국민통합</li> <li>관련 제도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04~2008)</li> <li>-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li> <li>-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시 · 도지역혁신협의회 운영</li> </ul> </li> <li>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및 수정 계획(2006~2020)</li> <li>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li> </ul>
이명박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경쟁력 강화와 삶의질 향상</li> <li>광역화와 연계협력 활성화</li> <li>특화발전과 지방분권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발전5개년계획 수립(2009~2013)</li> <li>-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li> <li>- 지역발전위원회,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구성</li> </ul> </li> <li>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li> <li>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 3차원 정책</li> </ul>

자료: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과제』, 2013

#### 4 지역발전정책과 재정정책

〈표 2〉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

비전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지역희망 HOPE 프로젝트) 비전으로 설정</li> <li>- 주민이 실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Happiness)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받고(Opportunity), 자율적 참여와 협업(Partnership)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Everywhere) 정책목표 제시</li> </ul>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 1: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마을, 읍면의 공간적인 연계를 토대로 기초 인프라부터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 고도 수준의 서비스까지 충족되는 생활공간 조성</li> </ul> </li> <li>- 전략 2: 맞춤형 패키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행복과 희망증진 효과가 높은 과제를 집중적·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부처간 연계·협업을 통해 패키지 형태로 지원</li> </ul> </li> <li>- 전략 3: 지역주도 및 협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기획·집행의 과정에서 지역 자율과 책임의 범위 확대,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지원, 소규모 마을 단위 수준의 연계협력사업을 확대·개편</li> </ul> </li> </ul>

자료: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과제』, 2013

- 지역발전정책과 지방재정지원은 ‘지역간 균형발전’의 동질적인 정책목적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책은 공간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구상, 재정지원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틀 내에서 각각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임
  - 따라서, 각각의 정책의 성과평가를 수행하고자 할 때 어느 정책으로 인한 결과인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정책수행과 재원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나아가, 지역발전정책과 지방재정제도를 통한 지역에 대한 지원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지역발전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지방재정 지원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구조임
  - 지역발전정책의 성과는 기존의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 규모, 자치단체의 산업특성, 인구구성, 재정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부별 지역발전정책의 내용과 비전을 살펴보면 재정과의 연계 부분은 참여정부 이후에는 광특회계 정도가 거론되고 있을 뿐이고, 그 이전에는 그 조차도 논의되지 못하였음

- 한편,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살펴보면 그 자체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지역발전정책의 목적과 다르지 않으므로, 지역발전정책의 성과는 지방재정 지원 부분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수도권 집중도(2008년 기준 49.2%, OECD 평균 23.8%)로 인하여 세원집중도가 심화되었고 이로 인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은 지역간 균형발전에 있어왔음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즉 국고보조금(광특회계 포함)과 지방교부세 지원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공간적으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그 방향이 같다고 볼 수 있음
  - 그 결과 지방이전재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국제비교시에도 GDP 대비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

구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근거 법령	『지방교부세법』 (행자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재원 구성	내국세의 19.24% ▶ 보통교부세 :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87% ▶ 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3% ▶ 분권교부세 : 내국세총액의 0.94%(‘05~’14 년간 배분) ※ 부동산교부세 별도운영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
용도	▶ 보통·분권교부세 : 용도 지정없이 자치단체 일반예산으로 사용 ▶ 특별교부세 : 용도지정·조건부여 가능	용도와 조건이 지정되어 특정목적 재원으로 운용
배분 방법	▶ 보통교부세 : 단체별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한 후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포괄배분 ▶ 특별교부세 :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시책수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사업별·시책별 교부 ▶ 분권교부세 : 경상적수요와 비경상적수요의 합계액	소관 부처별 중장기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부예산으로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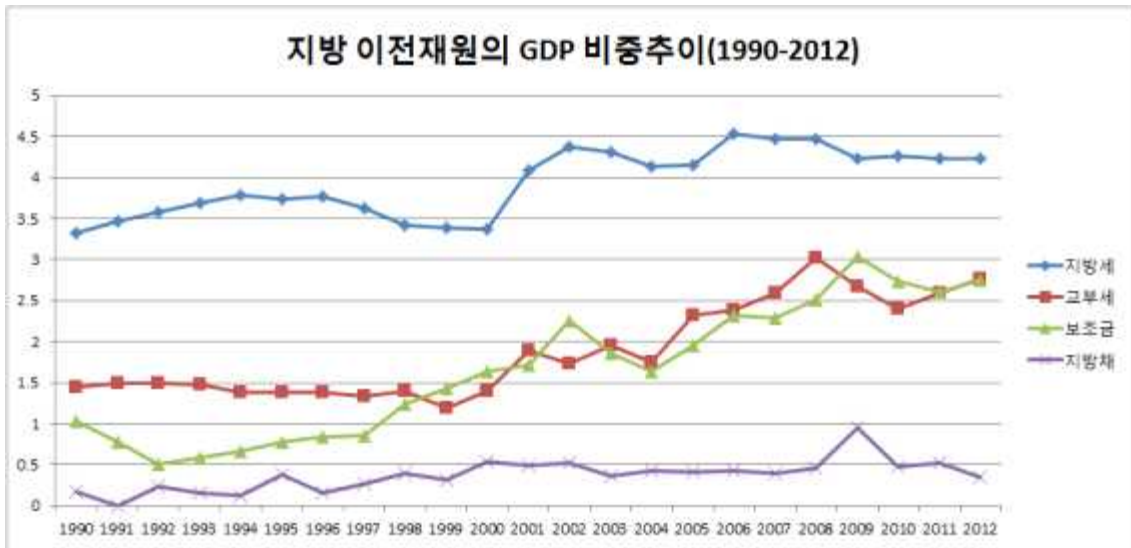
## 6 지역발전정책과 재정정책

구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성격	▶ 보통·분권교부세 : 일반재원(자주재원 성격) ▶ 특별교부세 : 일반재원(특정사업)	특정목적재원 (의존재원 성격)

자료: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그림 1] 지방 이전재원의 GDP 비중 추이(1990~2012)

(단위: %)



<표 4> 주요국의 형평화보조금 운영 현황

Federal/regional countries		형평화보조금 규모		형평화보조금 종류	지방정부간 형평화보조금
		GDP 대비 비중	정부지출 대비 비중		
Federal countries	Australia	3.96	-	1	yes
	Austria	6.19	12.41	15	no
	Canada	1.07	2.50	2	yes
	Germany	1.97	4.21	13	no
	Italy	3.00	6.33	5	no
	Mexico	3.75	-	8	no
	Spain	2.95	7.65	1	no
	Switzerland	3.58	9.76	7	yes
Unitary countries	Denmark	2.81	5.13	1	no
	Finland	3.79	7.42	4	no
	Greece	1.19	2.39	10	no
	Norway	0.54	1.18	2	no
	Portugal	1.85	4.05	4	no
	Sweden	2.61	4.61	4	yes
	UK	-	3.92	1	yes
한국(2007)		2.42%(5.0%)	5.34%(11%)	1(2,교육포함)	yes
한국(2011)		2.40%(5.8%)	10.07%(24.2%)		

주: 1.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경우, 중앙 지방정부간 공동세(Tax sharing) 부분 포함되었음  
 2. 한국의 ( )는 교육재정교부금 포함기준임  
 3. 정부지출 규모는 한국은행 자료, GDP는 통계청 자료, 교부세는 지방재정연감 결산자료, 지방교육재정은 교육통계연감 결산자료의 각 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음.

자료: Hansjörg Blöchliger, "Fiscal equalization: Tables", OECD(2007)를 참고하여 작성

- 이에 본 분석은 지역발전정책 및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재정지원과 수도권으로의 인구가동이 감소하는 것이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과 이러한 지원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고자 함
- 이는 정부예산 중 가장 높은 법정지출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재정지원 재원에 대한 정책성과평가로서 향후 지방재정지원의 효과성 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초자료에 해당함

II

조사 및 분석결과

1. 인구이동과 지역발전정책과의 관계

- 지역발전관련 재원규모의 경우, 지역발전특별회계(2013년 기준 약 9.7조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150조원 대비 약 6.2%, 국가전체예산 342조원 대비 약 2.8% 수준)만을 보면 재원자체의 규모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계정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미미한 규모로 나타남
  - 사실상 우리나라의 별도 '지역발전 계정' 규모는 상당히 큰 규모이며, 내용적으로도 18개 관련부처가 유사한 사업을 하나의 계정으로 '포괄보조금화'한 경우는 드문 경우에 해당함

<표 5> 광특회계 내 포괄보조사업의 운용체계와 세출예산

(단위: 억원)

구분	부처	포괄보조 사업명	사업 개편 이전 세부사업	'12	'13
시도 자율 편성 사업	문화부	①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박물관, 문예회관 등(18개)	1,382	1,425
		② 관광자원 개발	· 문화도시, 관광지 개발(8개)	2,225	2,072
		③ 체육진흥시설 지원	· 운동장, 수영장 등(11개)	876	1,027
		④ 지역문화산업 육성지원	· 문화컨텐츠센터 등(8개)	57	33
	문화재청	⑤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 지역문화유산개발 등(5개)	130	128
	농식품부	⑥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도농교류활성화 등(13개)	1,929	2,194
		⑦ 농어업기반정비	· 밭기반 정비 등(13개)	2,598	2,487
	농진청	⑧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5개)	382	402
	산림청	⑨ 산림경영자원 육성	· 임산물 수출촉진 등(3개)	116	221
		⑩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 휴양림, 수목원 등(4개)	1,363	1,453
	지경부	⑪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 섬유패션산업 등(10개)	798	593
	중기청	⑫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물류 기반지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2개)	1,683	1,540
	복지부	⑬ 청소년시설 확충	· 공부방, 수련시설 등(2개)	403	492
	환경부	⑭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 생활용수공급 등(4개)	3,696	3,696
		⑮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 자연환경보전 등(2개)	505	474
	국토부	⑯ 해양 및 수자원 관리	· 연안정비 등(3개)	415	482
		⑰ 대중교통 지원	· 물류단지 지원 등(5개)	533	478
		⑱ 민자유치접속도로 지원	· 가덕대교 건설 등(6개)	-	-
		⑲ 지역거점 조성지원	· 국민임대산단 조성 등(2개)	1,382	1,306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국토부	① 성장촉진지역 개발	· 개축지구 지원 등(3개)	2,201	2,201
	행안부	② 특수상황지역 개발	· 접경지역 지원 등(15개)	1,968	1,968
	국토부	③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 주거환경 개선 등(16개)	964	1,086
	농식품부	④ 일반농산어촌 개발	· 전원마을 조성 등(15개)	9,101	8,979

주: 제주계정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서상 나타난 자본지출 규모(지역발전 관련 정책사업, 일반+공기업+기타특별회계 '순계'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51.5조원에 해당함
  - 국가가 투입하는 지역재원에 해당하는 '총자본형성' 규모는 350조원이며 지역별 배분비중은 지역간 재분배가 반영된 자본지출에 비하여 지역간 격차는 크게 나타남
  -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본지출 비중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 중 상당부분은 지방정부 지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이상의 내용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매년 지출하고 있는 지역발전 재원규모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인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역발전 관련 '조세지출' 규모를 지역발전재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그림 2] 2005년 이후 자치단체 세출결산 분석(순계)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단위: 조원, %)



자료: 자본지출은 각 년도 지방재정연감의 '400자본지출'이며, 경상이전은 '300경상이전' 항목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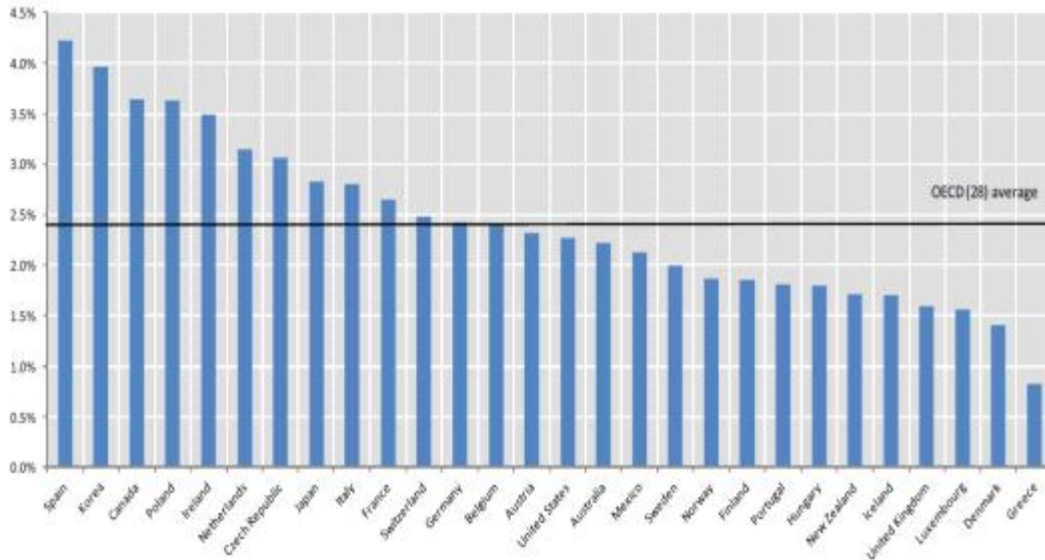
<표 6>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세출구조 통계목별 순계분석(총괄)

(단위: 십억원)

구 분	2011			2012		
	합 계	300-00 경상이전	400-00 자본지출	합 계	300-00 경상이전	400-00 자본지출
계	141,233	48,518	50,186	150,261	54,166	51,807
정책사업	113,787	43,414	49,704	121,344	48,669	51,298
자체사업	51,131	14,626	19,866	51,844	14,577	19,293
보조사업	62,657	28,788	29,837	69,499	34,092	32,005
재무활동	7,455	2,348	388	7,715	2,359	427
행정운영경비	19,991	2,755	94	21,202	3,137	81

자료: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안전행정부

[그림 3] SNGs' capital expenditure as a percentage of GDP (2009)



자료: OECD National Accounts, 2009, "Making the Most of Public Investment in a Tight Fiscal Environment Multi-level Governance Lessons from the Crisis", OECD, 2011(p.31, Figure 1.6)

□ 실증분석에서는 위에서 추정된 자본지출, 총자본형성 등의 막대한 규모의 지역발전재원의 성과평가 차원에서 수행하고자 한 것임

- 구체적으로 지역발전재원이 ① 시도간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쳤는가와 ②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았음
- 인구이동과 지역발전재원을 연계하게 된 계기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인구이동률'에서 착안하였음. 물론, 인구이동 하락은 경기불안정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하락, 대도시 고용률 하락 등 '시장효과'에 따른 것임. 동시에 대규모 지역발전재원 투자 역시 원인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하였음
- 지역발전재원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분배 정책으로 궁극적으로는 해당 거주지에서 일정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인프라 투자비용에 해당함
- 기존 인구이동 연구에서는 지역 SOC 정도인 '도로연장'과 같은 변수를 사용한 효과를 추정한 바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지역발전재원을 대상으로 추정하지 못하였기에 본 연구의 기여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인구이동과 재정정책 연계 관련 분석방법과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분석모형은 Mills et.al.(1983), Watson(1986)을 준용하였으며, 인구이동의 주요 원인으로 기대소득, 교육여건, 대도시 진입비용, 지방세, 주택가격 등을 설명변

수로 사용하였음. 설명변수 선택의 근거는 Harrios-Todaro 모형, Boadway and Flatters 모형, Brueckner and Kim 모형, Capital gain effect 모형에 해당함

- 분석기간과 대상은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의 16개 년도와 16개 시도이며, 분석 방법으로는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였음
- 분석자료는 거시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실제 이주를 경험한 미시자료, 시군 구자료도 활용하여 보았음
- 변수설계: 종속변수는 주민등록전입 및 전출기준으로 집계되는 통계청의 「인구이동통계」에서 '순인구이동' 자료를 사용하였음. 종속변수는 t 연도에 i지역에서 j 지역으로의 순인구이동을 i지역의 총인구로 나눈 비율( $M_{ij}^t$ )로 지수화하였음. 설명변수 역시 전입지역을 전출지역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표준화하였음

<표 7> 가설에 대한 예측 및 실증분석 결과

	HT	BF(공공재-재정정책 효과)			BK	Capital Gain
	기대소득	교육기회	총자본스톡/ 자본지출	지방세 /주거비	전월세 보증금	공시지가
예 측	+	+	+	-	-	+
결 과	?	+	+	?	+	+

- 분석결과에서는 지역발전 재원인 '지자체의 자본지출'과 '국가지출인 총자본형성' 모두 시도간 인구이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두 변수 모두 1% 이내에서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해당 자치단체의 자본지출 수준 및 국가직접 자본스톡 규모가 클수록 전입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자본지출은 기존의 기반시설 위주의 SOC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 및 체육 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향후 정책반영시 자본시설 확충에 대한 재정효율성과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경쟁력 강화 연계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국가직접 자본스톡에 해다하는 대규모 SOC 투자 역시 인구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균형발전 재원 정책 고려시에도 자본스톡에 대한

영향분석도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으로는 ‘기대소득’ 변수가 인구이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점임
  - 전통적인 인구이동 이론에 따르면, 인구이동률 결정하는 20~30대는 취업을 목적으로 이동하며 이 때 임금은 매우 중요한 이주요건에 해당함.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지역 간 임금격차 자체의 설명력은 보여주지 못하였음
  - 이러한 원인으로는 우선, 인구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20대 인구이동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지역간 임금격차가 있긴 하나 기타 정주여건, 즉 구매력을 감안해서 비교해 본다면 사실상의 지역간 임금격차는 사실상 미미함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음
  
- 위의 내용을 실제로 이주를 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시자료(재정패널)로도 확인해 보고자 하였음
  - 예상한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기준이 동일하여 지역 간 차이가 없는 ‘정부지원 현금’은 인구이동과의 연계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대도시 자본투자와 관련이 있는 ‘대중교통비’도 인구이동과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하였음
  - 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로는 해당 지역의 공공재가격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주거비’ 변수임. 주거비 항목은 이주시 고려하는 ‘비용’ 개념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마다 다른 공공요금요율을 의미하는 ‘주거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전입인구 숫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 ‘교육비’, ‘전월세보증금’ 등은 높을수록 인구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가 이주시 ‘비용’적인 개념보다는 ‘혜택’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상의 내용은 ‘시군구간 인구이동’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복지지출요인’이 아닌 ‘도로연장’과 같은 지역 SOC 변수가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 지역발전정책과 지역경제성장과의 관계

- 지역발전재원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성장(지역내총생산, 지역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음
  - 분석방법으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내생성과 시계열적 특성을 동시에 보완하기 위하여 동태적 패널 모형(Arellano-Bond Test)을 사용하였음
  - 한편, 지역경제수렴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GRDP 성장률' 변수를 사용했고, 본 분석에서도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장률 변수를 종속변수로 분석해 보았음.
  - '총자본형성' 재원은 '지역소득의 성장률'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 실증분석 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은 그 유통경로가 지자체를 통하여 지원하였거나, 국가가 직접 지원한 경우 모두 궁극적으로는 '지역내총생산', '지역소득' 나아가 '인구이동'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이상의 실증분석 연구는 인구이동과 재정정책의 연계가 가능한가에 대한 것이며, 이를 위해 시장효과와의 분리를 얼마나 정치하게 접근하느냐가 관건임. 나아가, 본 연구는 시장효과뿐만 아니라 제도적 효과(예: KTX 등) 변화도 살펴보고자 시도하였음

## 3. 해외사례로부터의 시사점

- 주요국의 지역정책을 살펴본 결과, 그간 장기간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졌고, 세계화, 분권화,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정부로의 재정이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 발생하는데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우리나라의 지역정책 성격을 규명해 본다면, 특정부처 중심의 경직적인 의사결정구조와 거의 차별화되지 않고 있는 정책목적, 지역주도적인 사업이 사실상 거의 전무한 점, 거버넌스 및 법구조의 중앙집권적 배분구조 등 다분히 낡은 패러다임으로 지역정책이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본 분석에서는 최근 지역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미국의 지역발전정책과 영국의 지역발전정책 전환배경과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음
- 먼저, 미국은 그간 지역발전정책은 개별 주정부 사안으로서 연방정부의 정책이 아니었기에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정책과는 가장 다른 모습을 보인 나라임
-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역간 격차심화로 인하여 도시의 황폐화는 미국의 연방차원에서 더 이상 주정부만의 문제로만 봐둘 수 없는 정치적 아젠다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것이 ‘SC2’ 정책에 해당함
- 미국의 SC2 정책은 과거 참여정부 당시 우리나라의 혁신계정과 유사한 목적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함. 첫째, 우리나라 지역정책과의 차이점은 재정지원방식의 다양화로 인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임. 특히, 연방위원회에서 지역으로 재정지원이 직접 이루어짐으로써 중간의 부처와 주정부를 통한 유통경로 차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임. 우리나라의 경우, 보조금법에 의하여 모든 지방재정지원은 근거가 되는 법이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통하여 시군구에 전달되도록 하고 있음.

<표 8> 한국의 공간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

구 분	계획의 목적	수립권자	계획승인
국토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인 국가발전 방향</li> <li>▪ 산업 및 균형발전 전략</li> </ul>	국토교통부	대통령
도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인 지역발전 방향</li> </ul>	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광역도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접 지역과의 공간 개발 및 지역 간 기반시설에 대한 공동의 이해</li> </ul>	시장, 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군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도시·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li> </ul>	시장, 군수	도지사
도시·군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정책의 실질적인 방안</li> </ul>	시장, 군수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 ‘국토기본법’에 따라 『OECD 한국도시정책보고서』 (2013, p.128, 표 2.4.)가 정리한 내용임

- 둘째, 우리나라 지역정책과의 차이점으로 매년 단위의 성과평가가 이루어졌다

는 점임. 본질적인 사업성과를 공유하여 이른 바 'Best practice'를 공유하는 방식, 기초자치단체(municipalities)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교육강화 등이 주요 내용에 해당함.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방식의 성과평가가 운영되고 있지만, 재정성과평가의 경우, '보조금을 배분하는 부처'의 성과평가로 사업을 인식될 뿐, 실제 자치단체의 사업성과로 평가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지속되고 있음

- 셋째, 각 도시별 프로그램 차별화를 시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는 또 다른 차이점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우수한 연방정부 직원들을 SC2 정책에 적극 활용하여 지역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한 인력운영의 차이점을 들 수 있음.
- 본 분석에서는 최근 미국의 지역발전정책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만, '오바마 정책' 색채가 매우 강하여 차기 정권이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가 유일한 관건일 것으로 보임
- 영국의 사례에서도 정권이 바뀐 이후 이전 정권의 정책은 평가도 제대로 하기 전에 폐기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은 MB 정부 이후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지역정책은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유권자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정치적인 속성이 있음. 이러한 지역정책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은 지역정책이 정치적 성향에 휘둘림으로써 '견고한 정책'으로서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영국의 경우, 최근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ies)에서 LEP(Local Enterprises Partnership)로 전환한 사례에서는 우리나라의 과거 광역경제권 구상의 실효성과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주민 과반의 지지를 얻어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런던 광역권'의 경우에는 새로운 권역설정을 통한 지역발전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광역구상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음
- 특히, 영국의 경우 정부간 재정관계 특성상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권한이 큰 경우에는 자원배분과 자원집행 주체의 법적지위가 중요함. 기존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내에서의 교부금과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 가운데 별도의 권역설정을 통한 지역정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지역배분단위와의 인세티브 구조 디자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III

## 정책제언

## □ (제안1) 지역발전재원 규모산정의 정교화를 위한 자본지출 계정의 추가분석 필요

- 지역발전 관련 재원규모 추정은 지역발전정책을 구상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에 해당함. 기존 지역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재원의 흐름을 의미하기 때문임
- 현재는 지역발전관련 부처의 국고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자치단체 예산서상 반영된 매칭비용을 합한 것으로 규모산정이 가능한데, 이는 자치단체 예산서상 나타난 자본지출 사업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음
- 현재는 지출내역으로 정책사업 내에서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을 구분하는 것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 재원이 어느 수입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우리나라의 예산관리 환경상 자본지출 예산서보다는 자본지출 계정의 별도관리를 통한 세입과 지출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
- 국가분 자본지출의 경우에도 세부항목 관리 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 (제안2) 지역발전재원의 성과측정 의무화

- 본 분석에서는 지역발전관련 재원이 결국 해당 지역의 지역인프라 구축에 긍정적이 영향을 미쳤고 이를 통하여 '인구이동'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음
- 이는 학술적인 방법을 통하여 정책의 효과를 측정한 것이며, 인구이동과 지역발전재원 데이터를 이용하여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한 것에 해당함
- 향후에도 이와 같은 기초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좀 더 나아가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성과측정 모형을 구축하여 재원의 효과성 검증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지역발전재원은 그 속성상 정치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절대적인 규모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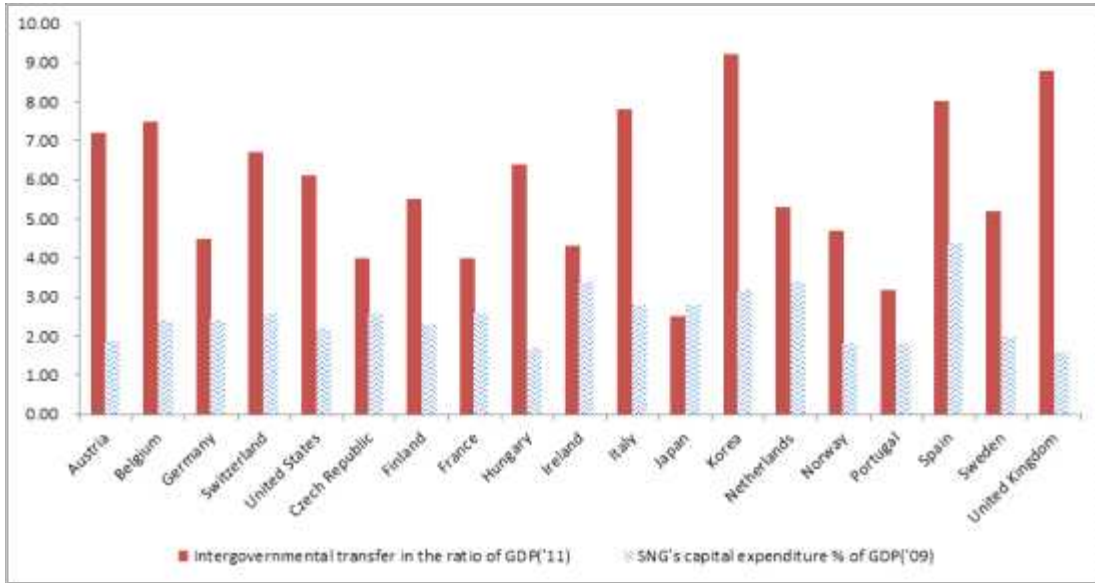
도 쉽지 않을 것이기에 더더욱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재원의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 (제안3) 지역발전재원 재원의 다양화 방안 모색

- 이상의 실증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지역간 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있는 수도권 인구집중도를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역의 시설투자적인 성격의 재원'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점임
- 그러나 현재의 재정수요는 복지수요로 집중되는바 국가와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 SOC 재원을 증가시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도 자본지출 재원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도 경험한 바 있으며 이들 국가는 자본지출 재원의 다양화로 지역 SOC 재원을 충당하고 있음
- 주요국의 이전재원 비중과 자본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즉,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비중이 높은 나라라 할지라도 자본지출 비중이 높지 않은 나라도 있으며, 일본처럼 이전재원 비중보다 자본지출 비중이 더 높은 나라도 있음
- 따라서, 지역발전의 재원부담 주체는 중앙 및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될 수 있고 이들이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방식'을 통한 규제완화 방식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지역발전재원의 특성상 장기지출 SOC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법에 의한 정부지출만이 법적구속력을 갖고 있고 그 밖의 재원투자를 불투명하게 보는 시각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정투입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추가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PPP 등으로 대변되는 민간투자재원 활용방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재정분권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계약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PPP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향후 추가분석을 통하여 지역발전 관련 재원확보 방안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발전재원 활용방안(부처 규제완화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그림 4] 주요국의 이전재원 비중과 자본지출 규모

(단위: %)



자료: SNG's Public investment % of GDP: OECD Regions at a Glance 2011 (OECD 2011)  
 SNG's capital expenditure % of GDP('09) : Making the Most of Public Investment in a Tight Fiscal Environment Multi-level Governance Lessons from the Crisis (OECD 2011)  
 Intergovernmental transfer in the ratio of GDP('11): OECD National Account

□ (제안4) 지역발전 관련 재정지출의 효율성 확보방안

- ① 지역발전관련 '부처간 지역발전정책 관련 보조금 정리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국고보조금 내 지역발전 관련 재원을 포괄보조사업화 하는 방안을 제안함
- 지역발전정책과 별개로 정부는 재정개혁과제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이나 'PAYGO'의 정착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보조금 중복사업에 대한 일부 정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행 예산관리 시스템 하에서 부처간 중복보조금에 통폐합 논의 차원에서 PAYGO 효과는 한계가 있으며, 그나마 실현가능한 부처 내 PAYGO는 사실상의 예산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시스템적으로 관련부처 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부처간 PAYGO'가 가능한 보조금은 지역발전계정 내 포괄보조금(Earmarked-block grants)이 유일함. 현행 광특회계(지특회계) 내 지역개발계정의 실링예산 사업은 재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부처 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음

- 지역발전과 관련한 주무부처는 국토부, 산자부, 환경부, 농림부, 안행부 등 매우 다양한데 이들 부처 간 보조금 조정이 쉽지 않으므로 지금으로서는 재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개발계정 내 포괄보조금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관련 중복보조금 통폐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음
- ② 또 다른 근본적인 발전방안으로는 기존 지역 간 균형발전재원의 중요한 축이었던 일반교부금인 지방교부세 중 일부를 '조건부보조금'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임. OECD(2009b, p.120)의 지역발전정책 권고안에서는 일반보조금을 성과측정이 분명한 'earmarking'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음
- 형평화보조금 비중이 높을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노력 인센티브가 약하고 렌트시킹 등의 재정책임성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지역발전 재원 활용에 있어서 형평화보조금과 함께 사업목적을 분명히 하는 조건부보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함

□ (제안5) 지역발전 재정지출의 효과성 확보방안

- 본 분석에서는 지금까지의 지역발전정책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은 인구유입에 유효한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성장, 지역소득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있음도 보여주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역발전관련 재원규모도 크고 국가적 아젠다로서 정책적 중요도도 높은 편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효과가 상당히 있었음을 알 수 있음

<표 9> 1997, 2005, 2012년 주요 지표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비중

(단위: %)

		GRDP	인구	지방세	자본지출	자본스톡
1997	수도권	47.1	45.5	54.8	36.6	31.8
	비수도권	52.9	54.5	45.2	63.4	68.2
2005	수도권	48.9	48.1	57.6	36.0	32.2
	비수도권	51.1	51.9	42.4	64.0	67.8
2012	수도권	48.2	49.3	54.7	30.9	33.4
	비수도권	51.8	50.4	45.1	69.1	66.6

주: 2012년 자본스톡은 2010년 수치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지역정책이 제시됨으로써 지역발전재원의 정책적 효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였음.
- 추가적인 재정투입에 앞서 기존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방안도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정책의 공간적인 권역설정시 기존의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연계를 통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 참여정부 당시의 균형발전정책, MB 정부의 광역권 지역정책 미진의 원인은 지역정책의 권역과 자원 배분단위와의 불일치, 사업주체인 지자체의 재정인센티브 미비, 기존 국고보조사업과의 관계파악 등이 고려되지 못하였기에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웠음
- 이상의 선례는 정부 정책이 시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주민의 혜택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단위와 자원의 배분단위까지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 IV

#### 기대효과

- 기존 연구의 틀은 지역발전정책과 지방재정지원을 각각 분석하면서 각각의 정책을 검토하기는 하였지만, 두 정책을 동시에 검토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분석적 시

도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그간의 지역발전정책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재정정책과의 조율을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본 분석은 그간의 인구이동 감소와 지역발전재원 투입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서 출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역발전정책 관련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지도 살펴보았음

- 매년 100조원 상당의 지방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서상 나타나고 있는 자본지출 예산은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임
- 정치적 중요도나 재정수요가 감소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자본지출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들 재원이 반드시 예산서상 잡히는 재원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즉, 지방공기업 등을 활용한 예산외 지출을 통한 재정지원이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음

□ (지역발전 재원의 다양화 모색) 선진국 추세로 볼 때, 국고지원 감소에 따른 지역발전재원대책 구체적으로 논의 필요

- 특히, '대도시 long-term capital financing'을 위한 대안으로 지방채나 PPP로 대변되는 민간투자재원 활용방법 논의도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새로운 재원조달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재원 조달 마련이 제시된다면 상당부분의 재원압박 요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재정지출의 효율성 확보 및 지역주도의 보조금 제도 개편) 지역발전의 주체는 재정책임을 지고 사업을 담당하는 '지자체'일 경우 부처중심적인 지역발전정책의 한계가 극복될 수 있음

- 시스템적으로 관련부처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부처간 PAYGO'가 가능한 보조금은 포괄보조금에 해당
- 국가의존도가 높아지는 지방소비세 확대나 지방교부세율 확대와 같은 일반보조금 증가보다는 지역발전 목적을 분명히 하는 'earmarked block grant'일 경

- 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사업효율화 유인이 있음을 의미
- 지역발전관련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사업화 방안은 재원을 주는 쪽에서는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재원을 받는 쪽에서는 사업선택권을 통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안임
- (자본지출 투자 확대를 통한 인구유인 정책 성과평가) 실증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간의 지방재정지원을 통한 지역의 자본시설 확충은 살기 좋은 마을을 형성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했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유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 따라서, 향후 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본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함을 의미하는데
  - 이는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재원으로 배분되는 지방교부세보다는 자본지출에 집중투자되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지방재정제도와의 연계성을 통한 지역정책 공간설정) 두 정책간의 연계성을 통한 지역발전정책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무엇보다 이상의 모든 대안들의 주체는 '지역' 일 때 가장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부처중심의 계획과 자치단체 집행이라는 구도에서 벗어나 지역자체가 계획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제안된 것임을 강조하고자 함

## 참고문헌

- 국토연구원, 『OECD 한국도시정책보고서』, 2013.
- 김광호,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재고찰」, 『한국개발연구』, 제32권 제1호 (통권 제106호), 2010.
- 김명수, 「'97년 이후 SOC 총자산스톡추계」, 『지역연구』, 제26권 제2호, 2010년 6월, pp. 71-85.
- 김명수,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총자산 스톡추계」, 『재정논집』 제19집 제1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4년 9월, pp. 84~110.
- 김명수·권혁진,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스톡 추계 연구(Ⅱ)」, 국토연구원, 2003.
- 김성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과의 관계분석」, 『재정학연구』, 제6권 제1호 (통권 제76호), 2013. 2, pp.27~56.
- 김성태·장정호, 「한국 지역 간 인구이동의 경제적 결정요인 : 1970-1991」, 『국제경제연구』, Vol. 3 No. 2, 1997.
- 김재홍, 「잉글랜드 광역경제권 정책의 전환: RDA 폐지와 LEP 창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5권 제1호, 2011 봄, pp. 187~214.
- 김정훈, 「지방자치단체 純재정편익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 \_\_\_\_\_, 『재정분권과 지역경제성장의 수렴』, 한국조세연구원, 2010.
- 김정훈·김현아, 『광역발전특별회계 발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2.
- \_\_\_\_\_,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배분실태 분석 및 상생활용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8. 12.
- 김종일, 「한국의 지역간 소득격차에 관한 연구」, 『응용경제』 제12권 제1호, 한국응용경제학회, 2010. 06.
- 김현아, 「중앙 지방정부간 보조금제도 현황과 개편방향: 지방교부세 VS 국고보조금」, 2014 제도·경제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2014(Working paper)
- \_\_\_\_\_, 「 시도간 인구이동과 재정정책」, 『재정포럼』, 통권 제203호, 2013년 5월호, pp. 23~38.

- \_\_\_\_\_, 「재정분권과 지역소득」, 『재정논집』,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제21집 제2호, 2007년 2월.
- \_\_\_\_\_, 「지역간 인구이동의 실증분석」, 『응용경제』, 제9권 제3호, 한국응용경제학회, 2008년 9월호.
- \_\_\_\_\_, 「재정분권과 지역소득」, 『재정논집』 21, 2007, pp. 1~21.
- 류덕현,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스톡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재정포럼』, 2005년 9월호, pp. 32~55.
- 문남철, 「EU 확대에 따른 지역정책 및 지역격차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3권 제3호 2010, pp. 442~456.
- 문시진, 「사회간접자본의 공간적 배분효율성과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경제학박사학위 논문(지도교수: 최병호), 2014. 2.
- 박재곤, 「영국 지역정책의 동향분석과 시사점」, 『지역경제』, 산업연구원, 2012년 6월.
- 박완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총생산, 본원소득, 가처분소득의 비교분석」, 『지역연구』 제29권 제3호, 2013년 9월, pp. 43~63.
- 박혜리, 「유럽구조기금의 운영실태와 한국 유사제도마련에 대한 시사점」, 『사회과학논총』 제9집, 숭실대, 2006.
- 변창흠,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수도권 발전방안」, 지역혁신교육원 강의자료, 2005. 3.
- 안흥기·김민철, 「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간배분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6.
- 오병기, 「동태적 패널 분석을 이용한 광역자치단체 투자적 지출의 지역경제 성과분석」, 『지방행정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88호), 2012. 3. pp. 137~160.
- 오재학, 「KTX 역세권 중심 지역경제 거점화 전략」, 『지역경제』, 지역발전위원회, 2010. 12.
- 임정빈·최재녕·홍근석,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지역이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Working paper, [www.kapa21.or.kr/data/data\\_download.php?did=5493\(2011?\)](http://www.kapa21.or.kr/data/data_download.php?did=5493(2011?))
- 장재홍, 「워싱턴 컨센서스 이후의 지역정책 논의 동향과 시사점」, 『공간과 사회』 제21권 3호(통권 37호), 2011년, pp. 128~163.
- 전병힐·송호신, 「정치적인 요인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 『재정학연구』, 제7권 제3호(통권 제82호), 2014. 8.
- 전은하·이성우, 「고속철도가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제8권 제4호, 2007. 12, pp. 73~87.
- 정일홍·이성우, 「KTX 개통에 따른 국토권역별 인구이동의 실증분석, 2004~2009」, 『지역연구』 제27권 제3호, 2011년 9월, pp. 121~138.
- 정준호, 「최근 영국 광역경제권 정책 변화에 대한 소고」, 『지역과발전』, Vol. 4, 2011 여름호.
- 주만수, 「지방재정은 수렴하는가?」, 『응용경제』 제11권 제3호, 2009, pp. 147~172.
- 한경원, 「지역정책의 세계적 동향과 시사점: 장소기반의 유럽연합 결속정책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 제44권 제1호(통권 58집), 2012년 6월호, pp. 109~124.
- 허재완, 「KTX의 지역개발효과에 대한 논란: 빨대효과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지역발전위원회, 2010. 12.
- 최병호, 「한국의 지방분권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공공자본의 민간부문 산출효과를 중심으로」, 2010, 미발표논문
- 최병호, 이근재, 문시진, 「지방분권 전·후 시기의 공공자본의 생산성과 공간적 배분 효율성 비교」, 『지방행정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88호), 2012. 3. pp. 81~106.
- Acemoglu, Daron and Simon Johnson, "Da Facto Political Power and Institutional Persist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96(2), 2006a, pp. 325~330.
- Amison, Philip, "Sub-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olicy in England since 1999: A comparison of Regional Development Agency and Local Enterprise Partnership 'models'," *SURGE Working paper series*, Working paper no.12, Coventry University, 2013.
- Auteri, Monica and Mauro Costantini, "Fiscal policy and economic growth: the case of the Italian regions," *The Review of Regional Studies*, Vol. 34, No. 1, 2004, pp. 72~94

- Barca, Fabrizio, Philip McCann and Andres Rodriguez-Pose, "The case for regional development intervention: Place-based versus place-neutral approache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52, No. 1, 2012, pp. 134~152.
- Brueckner, J. K. and Kim, H., "Land Markets in the Harris-Todaro Model: A New Factor Equilibrating Rural-Urban Migration Source," *Journal of Regional Science* 41, 2001, pp. 507~520.
- Cappelen, Aadne, Fulvio Castellacci, Jan Fagerberg and Bart Verspagen, "The impact of EU regional support on growth and convergence in the European union," *JCMS*, Volume 41, Number 4, 2003, pp. 621~44.
- Cebula, R.J. and Nair-Reichert, U., "Migration and public policies: a further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Vol. 36, 2012, pp. 238~248.
- Checcherita, Cristina, Christiane Nickel and Philipp Rother, "The role of transfers for regional economic convergence in Europe,"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series No. 1029, March 2009.
- Dahlberg, Matz, Matias Eklöf, Peter Fredriksson and Jordi Jofre-Monseny, "Estimating preferences for local public services using migration data," *Urban Studies*, 49(2), Feb. 2012, pp. 319~336.
- Escolano, Julio, Luc Eyraud, Marialuz Moreno Badia, Juliane Sarnes and Anita Tuladhar, "Fiscal Performance, Institutional Design and Decentralization in European Union Countries," IMF Working Paper, 12/45, 2012.
- F. Busillio, T. Muccigrosso, G. Pellegrini, O. Tarola and F. Terribile, "Measuring the effects of european regional policy on economic growth: A regression discontinuity approach," <http://dps.mef.gov.it/materialuval>, 2010.
- Fabrizio Barca, "An agenda for a reformed cohesion policy," A place-based approach to meeting European Union challenges and expectations (Independent report prepared at the request of Danuta Hübner, Commissioner for Regional Policy), Rome: Ministry of Economics and

- Finance, Italy, 2009.
- Fujita, Masahisa, Paul Krugman, and Anthony J. Venables, "The Spatial Economy: Cities, Regions and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MA and London: The MIT Press, 1999.
- Grassmueck Georg, "What drives intra-county migration: The impact of local fiscal factors on Tiebout sorting," *The review of regional studies*, Vol. 41, 2011, pp. 119~138.
- Guis, Mark, "The effect of income taxes on interstate migration: an analysis by age and race,"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Vol. 46, 2011, pp. 205~218.
- Hsing Yu, "A note on interstate migration and tax burdens: new evidence," *Journal of Applied business res* 12(1), pp. 12~14, 1995/1996.
- Ismail Issah, Tariq Y. Khan and Komei Sasaki, "Do migrants react to infrastructure differe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extented Harris-Todaro Model)?,"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s, Tohoku University, 2003.
- Jonathan Rigg, et. al., "The World Development Report 2009 'reshapes economic geography': geographical reflections," *Boundary Crossings, Royal Geography Society*, 2009.
- Junghun Kim, "Non-market effects an agglomeration and their policy response: Can we overcome the mismatch?," OECD Regional outlook: Building resilient regions for stronger economies, OECD 2011.
- Kim, J. "Non-Market Effects on Agglomeration and Their Policy Responses-Can We Overcome the Mismatch?," in OECD Regional Outlook 2011.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1.
- Kurekova, Lucia. "The Role of Welfare Systems in Affecting Out-Migration: The Case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IMI Working Papers*, 2011.
- Lucas, Robert E., "On Mechanism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2(1), 1988, pp. 3~42.
- Mills, K.E, M.B. Percy and L.S. Wilson, "The influence of fiscal incentives on

- interregional migration: Canada 1961-78," *The Canadian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I:2 Autumn 1983, pp. 207~229.
- Molly, Raven, Christopher L. Smith, and Abigail Wozniac, "Internal 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5, No. 3, Summer 2011, pp. 173~196.
- Myrdal, Gunnar,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London: Hutchinson, 1957.
- OECD, "Regions matter: Economic Recovery, innovation and sustainable growth," 2009b.
- \_\_\_\_\_, "How regions grow: trends and analysis," 2009a.
- \_\_\_\_\_, "Making the Most of Public Investment in a Tight Fiscal Environment Multi-level Governance Lessons from the Crisis," 2011.
- \_\_\_\_\_,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n OECD countries*, 2010.
- Rodriguez-Pose, Andres and Ugo Fratesi, "Between development and social policies: the impact of european structural funds in Objective 1 Regions," *Regional Studies*, Vol. 38, February 2004, pp. 97~113.
- Rodrik, Dani, Arvind Subramanian, and Francesco Trebbi., "Institutions Rule: The Primacy of Institutions over Geography and Integration in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Growth*, 9(2), 2004, pp. 131~165.
- Shan, Hui. "Property taxes and elderly mobility," *Journal of Urban Economics*, Vol. 67, 2010, pp. 194~205.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Cross-national comparisons of internal migration: An update on global pattern and trends," Technical Paper, No.2013/1.
- Watson, W. G, "An Estimation of the Welfare Gains from Fiscal Equalization,"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 19, 1986, pp. 298~08.